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방향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노 순 규

1.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는 설비대형화 및 신기술도입이 가속화함에 따라 산업재해에 의한 피해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에 대한 소홀은 각종 질병 및 직업병을 유발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은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손상과 경제손실이 기업 및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내외 노동환경의 변화가 기업이나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새로운 고용이나 교역조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즉 과거에는 주로 국내상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자국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비해 최근에는 국제간 교류확대와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된 제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은 단순히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인명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데만 그 목표가 있지 않다. 즉 기업경영 및 산업안전보건목표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용하여 그 분야에서 기술

을 개발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 및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2. 산업현장의 변화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철강, 화학공업의 발달에 의한 집약적 및 장치화 추세, 지하철 확장, 고속도로건설, 고속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확충으로 인해 각종 공사가 지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기술의 혁신에 따른 첨단산업의 확산기반이 마련되고 공장자동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수반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는 화학공정 등에서의 화재 및 폭발 등 기술적 원인에 의한 재해와 건설공사 등에서의 협착, 충돌, 추락 등 관리적 원인에 의한 재해가 다발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원인이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심층화되어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분석과 예방기술의 전문화, 세분화 및 첨단화 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비중의 확대와 정보산업의 본격화에 기인한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관리문제와 계속 증가하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직업병 및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1) 인력구성의 변화

산업사회의 분업화, 전문화에 기인한 숙련공의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근로활동 연령폭의 확대로 인해 근로자는 고령화될 것이며 또한 여성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취업업종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는 신체의 물리적 및 생리적 특수성에 의해 재해발생 요인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의 기준마련 등 산업안전보건 예방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 인력구조의 변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은 인력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야기하여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미숙련 근로자의 취업도 증가할 것이다.

2) 산업안전보건의 추구

사람의 신체 및 생명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산업풍토조성 및 정치적 민주화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산업장에서의 민주주의로 그 폭과 길이를 더해 가고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존중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적 욕구가 생활권적 욕구로 변화되면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 참여권 보장 등 안전보건문제가 노사분규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또 근로자는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할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과 직업안정기구의 활성화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수준이 양호한 곳과 열악한 사업장과의 구분이 용이해지면서 근로자는 취업 선택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수준을 높여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은 정부, 사업주, 근로자, 제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정부측의 문제로서 제도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로 인해 중복 규제가 심하다는 점이다. 즉 사업장 안전보건규제와 관련하여 80개 법령을 적용하고 10개 부처에서 관장함으로써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노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로 인한 투자 및 개선노력이 부족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측에서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를 규제차원에서만 시행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소한의 투자범위내에서 수용하는 소극적 산업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더구나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려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와 안전실천 의지의 결여이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사소한 실수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작업현장 근로자의 의식이 안전과 관련해 볼 때 확고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정도야, 이쯤이야'라는 단순한 생각이 각종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디서든 한시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적 및 기술적 낙후

성과 국제적 수준에의 미달이다. 30년 이상의 경제개발 기간동안 초기의 공장설비 및 기계의 노후화는 대형사고 발생위험을 안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근속기간 장기화 등으로 여러 유해환경에 오래동안 노출됨으로써 직업병 발생위험 등 산업안전보건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국제적인 노동 및 경제환경의 변화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을 교역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체계와 관련하여 기술개발투자부족, 전문인력양성 및 제도적 미비로 인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4. 제도적 보완과 맺음말

향후 우리 나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산업안전보건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 많다. 먼저 최근 여러 국내외 노동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정부규제완화, 인원 및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사업장 점검 및 감독위주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는 자율안전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시에 한해 강력한 감사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자율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지원체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안전분야 인원감축에 따라 대형사고가 증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자율과 함께 사업장의 책임을 더욱 강조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안전장치의 설치와 아울러 직무확대 등의 작업방식을 통해 작업의 단조성을 탈피하도록 하고 분임조활동 및 제안제도 등의 활성화로 자율적인 안전분위기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서의 안전보건이 경영방침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명심하고 '안전보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사항' 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모든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에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적 무역장벽을 극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국가발전, 근로자의 안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핵심과 목적을 사람의 생명을 최고가치로 여기는데 두고 모든 중심에 사람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인간존중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하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존의 규제만을 따라가는 이른바 소극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품안전, 공정관리 및 설비안전 등 원재료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모든 과정을 산업안전보건측면에서 기획관리하는 종합적 및 자율적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보건측면에서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은 한 사람의 재해자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